

지역문화와 생활문화 활성화에 담긴 과제들

김종휘

성북문화재단 대표

· 지방, 하면 중앙/상부에 종속된 변방/하부의 수직 관계라는 한국 근대사의 경험을 연상시킨다. 반면 지역은 영토와 권한을 일정하게 나누는 영역에서 탈 중앙집중의 정치를 실천할 수 있는 가능성의 개념에 가깝다. 지역문화진흥법의 '지역문화' 개념과 달리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와 '지방자치단체' (지역정부가 아닌) 개념을 쓴다. 여기서의 수평적 연대에 의한 민주주의 통치라는 지향성을 담아 지방이 아니라 지역문화와 지역분권으로 표현한다.

· 생활문화와 생활예술을 달리 사용하는 경우와 혼용하는 경우가 있다. 여기서의 혼용이 아니라 정책적 함의를 분명히 하는 의미에서 생활문화 개념을 쓴다. 생활예술 용어를 쓴다면 그것은 생활이나 예술의 본원적 가치 같은 뜻이 아니라, 생활문화 정책이 포괄하는 여러 분야/분과의 하나로서 하위적 개념이다. 이러한 개념 체계는 문화와 예술을 병렬(문화예술교육)하거나 예술의 가치와 장르를 동일시할 때 생기는 개념 혼선의 정리에도 필요하다.

■ 문재인 정부 첫 1년에

· 문재인 대통령은 5당 원내대표 간담회에서 내년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 실시를 추진하겠다고 재확인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논의와 더불어 '국민 참여형 개헌 논의기구' 방안도 거론했다. 핵심 의제는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집중된 권력구조 분산 외에도 국민적 관심 의제로서 선거제도 개혁, 지역분권 과제, 국민 기본권 강화, 헌법 전문 개정 등 여럿이 있다.

· 이중 지역분권 과제에 대해 대통령은 지난 4월 국회 개헌특위에서 두 가지를 밝혔다. 하나는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 등 자치권 보장이다. 다른 하나는 시도 지사가 참여하는 '제2 국무회의' 제도 신설이다. 대통령 선거 때 공약에는 광역 경찰자치제를 추가 발표했다. 이어 대통령 당선 직후 청와대 직제 개편을 통해 정무수석 산하 자치분권비서관, 정책실장 산하 균형발전비서관을 신설했다.

· 앞으로 1년의 일정 동안에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과 국민통합의 과제들과 더불어 지역분권 과제를 단기간에 조속히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다. 산적한 지역분권 과제들은 개헌 과정으로 수렴되었지만, 그러기까지 대통령의 각종 공약에 따른 정책 집행(업무지시)이 1년 동안에 지방 자치의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주민/시민에게 어떻게 체감되는지에 따라 지역분권에 대한 국민적 에너지의 결집은 상상 이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 요컨대 지역분권 과제는 1년간 우리가 겪을 단기의 현실 변화이자 1년 뒤에는 개헌 국민투표와 함께 국민의 일상을 혁신적으로 구조화/제도화하는 '생활혁명'의 변화로 다가와 있다. 이 안에 문화분권과 문화민주주의로 표상되는 지역문화와 생활문화 정책의 성패가 달려있다. 다시 말해 지역분권과 지역민주주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촉진하는 문화분권과 문화민주주의로서 지역문화와 생활문화를 추진해야 할 때다. 그 역은 전략적 실패다.

· 문재인 정부의 문화정책 중 예술장르 및 문화산업 지원 역시 지역분권과 지역민주주의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 좁히면 지역문화 및 생활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 연계/통합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에 대해 과감한 추진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향후 문화정책은 내부적으로는 분야, 장르, 계층 등 나눠 설계하더라도 그 총괄적 추진과 최종적 효과는 지역화와 협치, 이 두 가지로 관통할 수 있게 사전 기획하고 사후 평가해야 한다.

· 지역분권과 지역민주주의 문화분권과 문화민주주의 지역문화와 생활문화. 이렇게 일련의 정책적 가치 사슬을 그려볼 때, 그 추진 체계와 성과지표를 지역화와 협치로 가늠해야 하는 이유는 간명하다. 그간 중앙의 문화정책은 공급주의 일변도로 지역을 대상화했고 심지어 반反 지역적 중앙 줄 세우기를 반복했기 때문이다. 문화정책의 민관 협치 역시 중앙과 지역에서 온 힘을 다해 추진된 바가 대단히 미흡한 것이 현주소이기 때문이다.

· 이점에서 국가 문화정책 전달의 일선에 있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한국콘텐츠진흥원·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영화진흥위원회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까지 중앙 공공기관을 중간에 두고, 아래로는 지역문화재단과 지역별 민간 문화예술 생태계로, 또 위로는 문화부 장관관과 청와대 지역 비서관들과 사회수석/교육문화비서관 및 사회혁신수석으로 연결되면서, 지역화와 협치라는 공동의 화두를 가지고 어떤 협업 채널을 가동할지가 관건이다.

· 지역화와 협치의 기준을 가지고 청와대·정부·공공기관의 협업이 중요한 이유는 대통령의 첫 1년 임기 안에 대표 공약 상순위로 제시된 도시재생 연간 10조원(조정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음) 규모의 대형 정책사업과 별개로 문화정책이 분과적으로 집행되었을 때, 지역분권/문화분권 및 지역민주주의/문화민주주의가 밥·집·일로 요약되는 시민/주민 생활의 영역에서 의미 있게 체감되기 어려울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 나의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이후 '교체된 정권이 바꾸는 나의 삶'에 대한 물음과 눈높이하지 않는 정책은 앞으로 더 빨리 폐기될 수 있다. 분권과 민주주의가 밥·집·일에 응답해야 한다면 지역문화 정책은 지역의 문화예술 분과가 아니라 지역 전체의 고른 문화적 발전 전략이

되어야 한다. 생활문화 정책도 문화/예술 동아리를 넘어 지역에서 민주주의를 씨 뿌리고 꽃 피우면서 시민/주민의 생활 차원을 종합적으로 높이는 접근이어야 성공할 수 있다.

■ 지역문화와 생활문화의 가능성

· 분야/분과로서 문화와 예술이 한국 사회에서 향유되는 영역을 나눠보면 다음 셋이다. 예술 영역, 시민문화 영역, 비예술 영역이다. 예술 영역은 장르별 예술과 직접 연결된 활동(창작, 교육, 취미 등)을 말한다. 시민문화 영역은 등산, 독서, 체육, 여행 등과 게임, 영화, 음악 등 대중문화에 걸친 생활 여가의 여러 활동이다. 비예술 영역은 먹거리, 에너지, 주거, 보건, 과학, 기술 등 생활 전반에 걸쳐 앞의 두 영역과 구별할 수 있다.

· 생활문화 정책이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이자 시민/주민 생활형 의제와 직결된 목표를 가진 정책수단이 되려면 생활문화의 개념을 시민문화 영역에서 뿌리 내리고 조직화하면서 예술 영역과 비예술 영역으로 확장되는 전략을 사용해야 바람직하며 효과적이다. 반대로 생활예술을 중심에 두면 예술 영역에서 출발해 시민문화 및 비예술 영역으로 향하는 전략이 도출된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생활문화 정책의 향배는 달라진다.

· 문체부 2016 국민여가활동조사 결과 주말 여가시간이 10년 전 5.5시간에서 5시간으로 줄어든 노동중독 사회에서, 여가활동 1위 TV 시청(46.4%)의 현실을 회피하지 않고 동호회 활동 유형 1위 등산(12.3%)의 주계층 50대(17.8%)와 ‘혼자서’(59.8%)를 직시한다면, 나아가 이 비중보다 훨씬 밀도는 음악 감상과 독서 활동을 포함하여, 시민문화 영역에서 생활문화 정책의 시민/주민 주체로 육성하면서 예술 및 비예술 영역과 결합하는 것이 절실하다.

· 가나자와시 시민예술촌처럼 시민문화의 제반 활동을 바탕으로 공간 기반의 예술취미 활동이 주민 주도형 클럽/동아리로 향유되고 여기에 지역의 기획자와 예술인이 결합하는 지역 생활문화 생태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코스프레 활동이 시각예술 혹은 공연예술로 나뉘어 분과적 지원을 받지 않고 폭넓게 융합적으로 전개되는 시민문화의 영역에 존재하면서 전통 마쓰리 주체와 마찬가지로 지역의 생활문화 주체로서 수평적 교류의 일원이 된다.

· 우리 현실에서는 등산, 체육, 음악 감상, 독서 등과 대중문화 전반의 여가활동을 재조명하면서,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의 문화정책 공약에 있는 도서관 등의 메이커 스페이스 확충과 같은 메이커 문화 그리고 시민/주민 주도의 미디어 활동의 가능성을 같이 추진하면서, 기존의 예술 동아리(전문가 동아리형이든 동주민센터의 수강생 동아리형이든) 활동을 시민문화 영역의 민주주의 시민 주체로 육성하는 생활문화의 정책 기조 안에서 재편하는 것이 관건이다.

· 이렇게 보면 생활문화의 활성화는 처음부터 지역문화의 진흥, 즉 지역화라는 종합 계획과 민관 협치라는 전체의 틀 안에서 기획되고 배치되어야 한다. 즉 지역의 예술 창작과 문화 기획에 걸친 다양한 (준)전문가 활동이 생활문화와 별개로 각기 구축되고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시민/주민으로서 장르간, 전문가와 주민간, 성인과 아동청소년간에 활발한 교류와 융합적 활동으로 표현되도록 지역별 문화생태계의 시민문화 관점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

· 왜 생활문화 정책을 추진하는가. 요약하면 예술창작 따로 예술교육 따로 시민문화 따로 전문가 따로 주민 따로 산재했던 고립적 활동과, 이런 분리를 부추키며 공적 자원을 전부 따로 공급했던 중앙의 분절적 지원을 지역에서 하나의 생태계로 연결하여 민주주의 시민 주체를 육성하고 지역분권과 지역민주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이점에서 생활문화는 각기 따로 있던 것들을 지역에서 모두 연결하는 지역문화의 종합계획 안에 있어야 한다.

· 요컨대 지역문화와 생활문화의 추진 체계상 기초지자체 단위의 민간 문화 및 예술 생태계의 재구축과 기초문화재단의 자기 혁신을 통한 민관 협치라는 추진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 근린생활권에서 지역문화와 생활문화가 종합적으로 활성화될 때, 광역과 중앙에서 분야/분과적 공급을 늘렸어도 달라지지 않았던 소비 대중의 강박적이고 획일적인 생활여가 실태를 타계할 수 있으며, 지역에서 민주주의 시민/주민 주체의 등장을 기대할 수 있다.

· 기초지자체 단위는 생활권의 일상에서 다양한 사회적 관계가 촉발되고 장려되도록 미시적 제도와 조직의 장을 마련하는 일에 전념해야 한다. 지역문화와 생활문화 정책의 일선이 말아야 할 사명이다. 반면 광역과 중앙은 기초생활권 단위에 기획 권한과 포괄적 예산 집행의 여건을 제공하면서, 기초 단위가 대처하기 어려운 예술장르 및 문화산업 지원을 받침하고 이 또한 중단기적으로는 지역화와 협치의 원리로 재조직화하는 일을 말아야 한다.

■ 지역/생활문화 5가지 제안

[1]

정부의 ‘도시재생 + 지역/생활문화 + 사회적경제 + 청년주거/일자리’ 정책사업을 지역에서 통합하여 기초지자체 단위의 민관 협치 뉴딜 프로젝트로 추진해야 합니다.

· 연간 10조원 규모의 도시재생 뉴딜은 도시재생 + 주거환경개선 + 공공주택공급의 패키지다. 정책효과는 쇠퇴 도심, 노후 주거지, 뉴타운 해제구역에 중소규모 개발 모델을 적용해 공공임대주택, 마을주차장, 어린이집, 도서관, 무인택배센터 등 공공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주거 안정, 지역 일자리, 지역경제 개선으로 제시된다. 아울러 도시재생 연계사업들이 12대 약속 중 지역분권, 사회적경제, 청년, 문화정책 분야에 중복 혹은 별건처럼 언급되어 있다.

· 차례대로 살펴보자. 지역분권 정책에서는 “지역 산업단지 주변 대학/대학원 연계 문화예술 체육교육 지원과 청년 자원 연결”이 거론되어 있다. 서울시 캠퍼스타운 사업의 시행착오(도시재생 분과적 공급과 지역 통합적 수요의 불일치)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경제 정책에서는 도시재생 연계 거점 유형만 소개되어 있다. “① 주거+일자리+보육 통합형,

② 문화+창작+일자리+주거 통합형 ③ 관광+먹을거리+지역사회 통합형” 등이다.

· 청년 정책에서는 “낮은 월세의 역세권 청년임대주택 공급”이, 생활비 절감 부분에서는 “대학생 주거 해결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같은 내용으로 언급되어 있다. 반면 문화정책에서는 “① 지역 유희공간 활용 예술창작공간 조성, 청년기획자와 예술인에게 작업공간 지원, ② 지역 기반 문화콘텐츠 창작 주거인프라 조성, 청년콘텐츠 제작자 인큐베이팅, ③ 예술교육, 생활 문화, 지역문화재생 일자리 제공”이 제시되어 있다.

· 보다시피 문화정책은 물론 타 정책 분야에서도 도시재생 연계 사업의 솔루션은 대부분 문화적 영역이자 지역 체감형 현안이다. 재개발/재건축과 뉴타운사업처럼 부동산투기로 악용되는 도시정책을 벗어나고자 한다면,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은 지역별 맞춤형 문화재생이 핵심 수단이다. 문제는 핵심 수단들이 전부 분야별로 흩어져 있고 도시재생은 여전히 분과로서의 별도 도시재생 정책처럼 나열되어 있다는 점이다.

· 요컨대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은 지역별 도시정책 종합 비전으로 구조화되어야 하고 분야/분과별 정책사업은 지역별로 통합 플랫폼을 통해 민관 협치의 뉴딜 프로젝트로 진행되어야 한다. 지역의 도시재생지원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청년중간지원조직, 주거 및 복지기관은 물론이고 지역문화재단이 함께 지역별 도시정책 뉴딜 민관 협치틀로 모여야 하고 종합 계획 아래 다양한 레벨의 역할 분담과 협업을 추진해야 성공할 수 있다.

·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은 루즈벨트 대통령의 대공황기 뉴딜과 함께 회자된다. 미국의 1차 뉴딜은 분과적 공급과 분과별 기득권 저항에 실패했고 2차 뉴딜에서는 분야별 공급을 통합한 ‘공공사업진흥국’의 돌파로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2차 뉴딜은 중앙의 통합적 공급과 동시에 지방정부와의 협업으로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공공 기반시설 공사의 지역 일 자리를 대거 창출하고 음악/미술/연극 등 예술인 지원을 뉴딜 안에 끌어들었다.

[2]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여타 산하기관 - 광역문화재단 - 기초문화재단의 하향식 전달체계를 상향식 의사협의 구조로 재편해야 합니다.

· 대통령은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제2 국무회의’ 제도 신설을 공약했다. 대통령중심제의 지방자치제에서 대단히 파격적인 전환이다. 중앙정부가 국가정책을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정부 대하듯 협의하겠다는 지역분권의 취지를 따르자면, 서울시는 자치구 구청장이 참여하는 ‘제2 서울시정회의’ 제도를 신설할 수 있다. 서울문화재단 역시 자치구 문화재단이 참여하는 ‘제2 서울자치구문화재단회의’를 신설 운영할 수 있다.

· 이런 지역분권형 상향식 의사협의 구조와 마찬가지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역시 기초에서 광역으로 올라오는 의사협의 체계로 구조화된 지역위원회(예컨대 17개 광역문화재단 대표 참여)

를 중심에 놓고 장르별 소위원회를 옆으로 두는 조직으로 재편할 수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도 별개로 있기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분야별 본부가 되거나, 최소한 기초·광역·중앙의 상향식 의사협의 구조로 바꿀 필요가 크다.

- 지역별 통합 플랫폼이 가동되기 위해서는 중앙에서 분산 공급을 최소화해야 한다.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하나의 중간지원조직으로 통합되고 그 안에서 분야별 임기제 본부장 체제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이것이 아니면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지역 지원을 제각기 시행하기 전에 사전 협의하여 현장의 기획 권한과 포괄적 예산 집행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야 지역별 통합 플랫폼이 제대로 가동될 수 있다.

- 지역 현장의 기획 권한과 포괄적 예산 집행이 가능해지면 예술인 복지는 물론 시민/주민 체감에서도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예컨대 상주예술단체 지원이나 문화예술교육 지원이 획일적인 기준과 방식에 의해 전국 등수를 매기는 종전의 체계로는 지역문화와 생활문화의 활성화란 요원하다. 지역 특성에 맞게 상주예술단체와 문화예술교육이 이뤄지면 창작, 교육, 복지, 일자리, 향유는 별개가 아니라 통합적인 상호작용 관계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3]

기초문화재단은 각 지역에서 민간과의 협치틀을 제도화하여 생활권 지역문화와 생활문화 진흥의 전담 조직으로 과감한 자기 혁신을 추진해야 합니다.

- 문재인 정부의 공약에는 공공기관 혁신을 향한 내용이 제법 많다. 공공기관 사회적가치 기본법 제정, 감사 독립성 등 책임경영제, 노동이사제, 시민단체 참여 국민중심 경영평가, 공공부문 상시일자리 비정규직 전환, 고용친화적 경영평가제 도입, 노사자치주의 원칙 훼손 행정지침과 지도 폐기 등등. 여러 분야에 걸쳐 강조되어 있는 공공기관 혁신 공약들을 광역 및 기초문화재단에 적용한다면 실로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 이제까지 광역 및 기초문화재단은 지역의 시민/주민은 물론 민간 문화/예술인과 협업하고 협치하는 중간지원조직이라기보다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대행사 성격이 강했다. 일부 혁신적 사례를 만들어도 단체장과 재단 대표가 교체되면 금세 무위로 돌아갔다. 이 과정에서 지역문화재단이 직접 실행하거나 공모로 심사하는 사업이 태반을 이루면서 지역문화와 생활문화를 통해 민주주의 시민/주민 역량을 육성하는 역할과는 거리가 멀어졌다.

- 또한 광역과 기초문화재단이 옥상옥 행정기관으로 존재하는데도 중앙정부/기관의 지침과 매칭사업 등으로 '권한 없음'과 '과다한 행정사무'로 인해 자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다는 태도를 취해왔다. 그 결과 중앙정부/기관 공모를 놓고 광역문화재단이 민간과 경쟁하고 광역문화재단 공모를 두고 기초문화재단이 민간과 경쟁하는 폐단이 쌓였다. 이 고리를 끊자면 중앙정부/기관, 광역문화재단, 기초문화재단의 사명과 기능을 각기 차별화해야 한다.

· 무엇보다 지역문화진흥법과 시행령 개정을 통해 광역문화재단과 기초문화재단의 서로 다른 표준을 제시하고, 비영리 재단법인에 대한 경영평가 역시 공기업의 수익성이 아닌 사회적 편익에 따르도록 법제도의 준비가 필요하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장의 문화정책 집행기관으로서 갖는 기능과 중앙 광역 기초로 체계화된 지역문화재단의 보편적 기능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공기업법, 출자출연기관법 등 제반 법률에서도 일정한 개정이 필요하다.

· 물론 법제도의 준비에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 전이라도 대통령의 업무지시나 중앙정부의 의지에 따라 각종 정책지원에서 광역문화재단과 기초문화재단의 혁신을 견인할 수 있는 수단은 많다. 기초문화재단과 의사협의 구조를 갖춘 광역문화재단에게, 기초생활권의 민간 문화/예술인 및 시민/주민과의 협치를 제도화한 기초문화재단에게 적절한 이니셔티브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신호를 줄 수 있고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

[4]

향후 문화정책은 문화계정 뿐 아니라 생활계정과 연계된 포괄적 정책효과와 지역 통합플랫폼의 관점에서 문화/예술인과 청년의 역량 성장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 지역의 문화/예술인 다수는 문화정책 지원사업 뿐 아니라 도시재생, 마을만들기, 사회적경제 등 타 정책분야의 지원사업에도 참여한다. 청년도 동일한 양상이다. 문제는 이들 제반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문화/예술인과 청년의 오피니언 계층이 겹친다는 점이다. 더 큰 문제는 중복지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칸막이로 나뉜 대부분의 지원사업에서 인건비 비중이 매우 작아 지원사업에 열심히 참여하면 할수록 참여 주체의 역량이 소진된다는 사실이다.

· 그러나 각종 정책 지원사업의 목표는 갈수록 하나의 큰 방향으로 수렴되고 있다. 문화정책 뿐 아니라 여타 정책의 목표를 살펴봐도 대동소이하다. 일자리 창출 과제가 경제정책에만 있지 않듯이, 마을공동체 활성화 과제 역시 특정 정책에만 못 박혀 있지 않다. 문화/예술의 역할도 문화정책에만 갇혀 있지 않다. 이렇듯 각종 정책사업의 목표가 겹치는데도 참여 주체에 대해서는 통합적 역할을 하도록 권장하기는 커녕 분열적으로 참여하게 만든다.

· 이렇게 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아무리 많아진다 해도 지역에서 민주주의 시민/주민 주체의 등장과 역량 성장은 불가능하다. 동일한 목표이고 동일한 지역이며 동일한 참여 주체인데도 부처별 집행이 분리되고 지역 안에서도 분리되고 주체의 대응도 분리된다면 성장이 아니라 소진밖에는 없다. 그것도 지역 공동체적 성장과 가장 반대되는 지원사업 참여 주체의 개별적 소진이다. 당연히 사업의 성과와 사람의 노하우가 축적될 수 없다.

· 대안은 특별한 데 있지 않다. 예술인 복지를 위한 정책이 별도로 있어야 하지만 궁극적인 대안은 예술인이 시민/주민이자 예술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에서 일인다역의 주체로 성장해야 한다. 한 사람의 주민이자 예술인으로서 주민참여예산의 일원이자 예술강사이면서 창작자이고 소비자협동조합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으려면, 앞서 말했듯 지역 통합플랫폼이

준비되어야 하며 그 성과지표로서 문화/예술인과 청년의 성장을 평가해야 한다.

[5]

문화/예술인과 청년의 좋은 일자리 창출과 지속은 정규직 확충과 창업 활성화 외에 각 지역에서 생활소비의 비용 절감과 연결된 소득주도 지역경제의 성장입니다.

· 서울시 성북구에는 SH, 중소기업청, 성북구, 사회적기업 등이 협업해 청년과 문화/예술인 대상으로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실험을 하고 있다. 청년 1인 창조기업인을 위한 '도전숙'이 6호까지 공급됐고 내년엔 10호까지 예정되어 있다. 연극인을 위한 '배우의 집'도 2호 가 들어섰고, 문화/예술인을 위한 '정릉예술인마을'도 생겼다. 나아가 이들 여러 계층이 함께 입주하는 128세대 규모의 공공임대주택 '창조인빌'이 곧 월곡동에 들어설 예정이다.

· 이들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문화/예술인과 청년은 현재까지 총 150여 세대 200여명에 이른다.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다. 이들에게 일어난 삶의 변화는 중단기 주거 안정에 따른 지역 정주형 공동체 활동의 증가였다. 성북구청 및 성북문화재단과의 공동사업에 주체로 참여하면서 마을만들기나 창업활동에 두루 참여하는 리더로 성장하고 있다. 결국 좋은 일자리의 창출과 지속은 지역의 주거비용 절감을 바탕으로 하는 생계와 의미가 통합된 소득에 달려있다.

· 소득 주도의 성장정책은 '소득 최저선을 올리는 방편'과 '비용 최고선을 내리는 방편'을 두루 활용하는 것이 좋다. 소득을 올리는 일방은 고비용 생활비의 지출을 각자 감당하는 쪽이 되고 비용을 내리는 일방은 소득 향상은 각자 감당하는 쪽이 된다. 성북구의 사례는 고비용 생활비 지출의 큰 몫을 차지하는 주거비용을 공공에서 낮추는 한편 여러 개로 쪼개진 소득을 합치고 소비 역시 지역 순환형으로 지출하게 하는 통합적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 이점에서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과, 지역문화 및 생활문화 정책과, 청년 주거 및 일자리 정책과, 사회적경제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이 별개일 수 없다는 점을 거듭 환기할 필요가 크다. 중앙정부의 부처별 공급이 불가피하다면 최소한 지역에서는 통합 플랫폼으로 여러 정책 수단을 하나로 연결해서 집행할 수 있어야 문재인 정부 1년에 걸쳐 단기적 현실의 변화를 실감하면서 '교체된 정권이 바꾸는 나의 삶'을 꿈꾸고 신뢰할 수 있을 것이다.